

II.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(II)

2010. 12. 29.

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(Ⅱ)

-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갈등현안 현장조사 -

신기원 교수(신성대학)

목 차

1.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갈등
2. 당진-아산 산업기지 항만준설 관련 갈등
3. 동부건설의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
4. 태안 광업권 출원관련 갈등
5.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갈등

1.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갈등



3

■ 개요

-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판결에 의해 해상도계를 인정하고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의 당진군 자치권 인정
-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신규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분쟁조정신청

■ 진행경과

- 2009년 7월 신규매립지 당진군토지로 신규 등록
- 2010년 2월 해당토지 등록은 무효로 행안부장관이 귀속단체결정해야 한다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
- 2010년 5월과 6월 추가 신규매립지 당진군토지로 신규 등록

4

■ 성격(특성) · 쟁점 · 이해관계자 분석

-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행정관할구역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임
- 해상도계 및 관할구역에 대한 법규 미비
- 자치단체간 상호 협상과 의견 공유를 통한 해결방식이 아닌 제3자를 통한 해결방식으로 분쟁지속 기간 장기화

■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

- 평택당진항의 개발 목적 검토
- 호혜평등에 입각한 상호동반자적 협력체계구축 필요
 -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
 - 민간차원의 문화교류

5

■ 해결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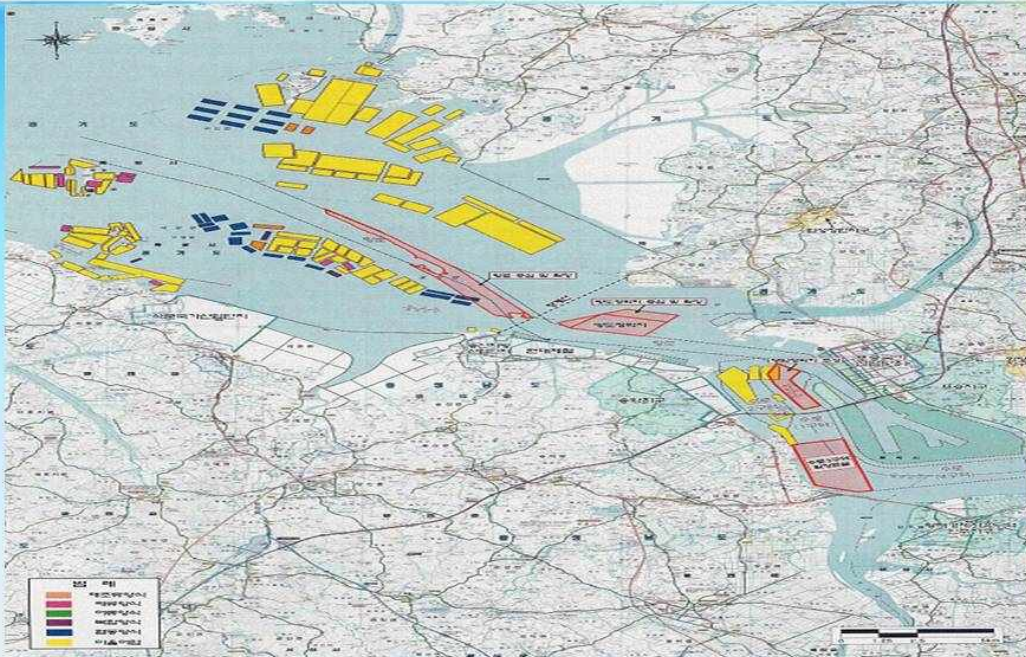
-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및 수용
- 여론 및 정치인 등을 통한 우리측 주장 타당성 행정안전부에 전달

■ 비교 : 정책건의, 행정사항 등

- 충남도에 항만관련 기관 신설
- 해양(항만)관련 공무원 보충 및 전문성 제고
-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매립지 분쟁 해소

6

2. 당진-아산 산업기지 항만준설 관련 갈등



7

■ 개요

- 아산산업기지 항만개발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과 갈등 발생
-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 의혹 증폭

■ 진행경과

- 2010년 7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당진군으로 환경영향평가(재협의)(초안) 송부
- 2010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반발
- 2010년 11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계획서 환경부에 제출

8

■ 성격(특성) · 쟁점 · 이해관계자 분석

- 사업허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지역 주민간의 갈등
- 당진군은 권한이 없고 협의의견만 제출하여 갈등해결에 한계
-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 표출

■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

- 현실타당성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의 오해 불식
- 주민들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설득과정 필요
- 1회성 민원으로 파악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의견 전달 및 반영 등으로 잠재된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 필요

9

■ 해결 방안

-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환경부의 적정한 환경영향평가

■ 비교 : 정책건의, 행정사항 등

- 해당지역도 인접한 평택시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개발계획 필요
-연육교의 조속한 착공
- 삼교천 퇴적층이 여름철 수문개방 시 서해대교주변에 쌓여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

10

3. 동부건설의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



11



12



13

■ 개요

- 동부건설이 동부제철 증설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 동부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
- 당진군과 동부건설 및 지역주민들간 갈등이 복합된 양상
- 발전소건설계획이 확정될 경우 다양한 상황 전개 예견

■ 진행경과

- 2009년 12월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서 제출
- 2010년 8월 당진군 및 당진군의회 건설 반대
-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

14

■ 성격(특성) · 쟁점 · 이해관계자 분석

- 대기오염배출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환경시설 관련 갈등
- 당진군과 민간기업의 갈등 및 주민간 갈등 이 복합적으로 연계
- 결정권 없는 자치단체가 군정책방향과 관련 반대의견 표시
- 반대를 통해서 얻는 이익 존재

■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

- 당진군과 동부건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
- 추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모색
- 왜목마을이 관광지로서 갖는 가치 보존

15

■ 해결 방안

- 허가와 불허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 마련
-점점을 찾으려는 노력 필요

■ 비교 : 정책건의, 행정사항 등

- 투명하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
- 화력발전소 주변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기준 새로 정함
- 자치단체에게 공모하여 전력사업을 신청하는 방안 모색
- 정치지도자들의 포퓰리즘 경계

16

4. 태안 광업권 출원관련 갈등



17



18

■ 개요

- 외지에거주하는 업자가 광업권을 출원하여 현지주민들이 반발하여 생긴 갈등으로 현재 진행중임
- 일부 지역의 경우 20년전 광업권출원으로 소송에 시달리는 등 피해의식 강함
- 광업권 설정이 갖는 문제점 여러 지역에서 제기

■ 진행경과

- 2010년 7월 태안군으로 광업권설정 출원 공익협의 통보
- 2010년 7-8월 지역주민, 태안군의회 반대의견 지식경제부에 전달
- 2010년 12월 현재 출원된 4개 지적 중 1개는 불허, 3건은 실지조사 대기 중으로 내년 초 실시 예정

19

■ 성격(특성) · 쟁점 · 이해관계자 분석

- 광업권출원인과 해당지역간 갈등으로 민민간 갈등
- 현재 진행중인 갈등으로 광업권설정의 불합리한 측면에서 야기
- 내년 초 실지조사를 통해서 허가로 결정될 경우 제2의 안면도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

■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

- 불허로 결정되기 위한 방안 마련
-광업등록사무소 재방문 및 실지조사 시 의견 개진
- 광업법 재개정

20

■ 해결 방안

- 광업등록사무소의 불허 결정

■ 비교 : 정책건의, 행정사항 등

- 광업법의 내용 검토 및 불합리한 내용 개정
- 광업권을 둘러싼 행정적 피해 및 부조리사례 수집 및 개선

21

5.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



22



23

■ 개요

-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서부발전의 이해가 맞아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반 이행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갈등
- 건설을 반대하는 서산시와 서부발전간 갈등, 서부발전과 반대주민간 갈등,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의 갈등이 복합된 사안으로 현재 진행중임

■ 진행경과

- 2007년 9월 가로림조력발전(주)설립
- 2007년 12월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가치평가: 개발 보다 보존
- 2008년-현재 찬성과 반대 의사 표명
- 2010년 10월-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

24

■ 성격(특성) · 쟁점 · 이해관계자 분석

- 정부의 이율배반성이 내포된 갈등
- 환경보존과 자원개발이란 양상의 갈등-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공익의 갈등
-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 행태
- 자치단체의 권한 미약

■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

-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충남도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 모색
-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최대한 현실 반영

25

■ 해결 방안

- 충남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로림만에 교량 건설
- 주민들의 반대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 필요
-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

■ 비교 : 정책건의, 행정사항 등

-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
-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개념 재정립
- 다양한 방식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
- 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

26